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계좌의 출금이 막힙니다

4,890개 금융회사의 공통 업무기준과 예외 지급 절차를 나눠 봅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9월 7일 발표와 9월 11일 시행 내용을 대조해 자동 차단, 허용 입금과 긴급 예외를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9.11	연번	2026_97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11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조치를 상속재산 보전의 공통 최저선으로 봅니다. 다만 자동 차단이 상속재산 조회나 상속인 지급까지 끝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은 자동이체 중단과 예외 지급 서류를 확인하고, 금융회사는 차단 사유·예외·이의절차를 같은 안내문에 적어야 합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회사에 다음 날 전달돼 고인 명의 계좌의 출금·이체가 제한됩니다. 연금·보험금 등 필수 입금은 받을 수 있고 장례비·의료비는 증빙을 거쳐 예외 지급할 수 있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행정기관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그 정보가 다음 날 금융권에 전달되고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성 거래가 제한됩니다.

시행	2026년 9월 11일	전 금융권
참여	4,890개 금융회사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 등
전달 주기	월 1회에서 매일	사망신고 다음 날
제한 거래	출금·이체·자동이체	고인 명의 계좌
허용 거래	연금·보험금 등 필수 입금	입금 전용
긴급 예외	장례비·의료비	증빙 뒤 직접 지급

종전에는 사망정보가 월 단위로 공유돼 신고 뒤에도 계좌가 움직일 수 있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새 기준은 정보를 매일 보내 다음 날부터 출금성 거래를 제한합니다.

모든 거래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보험금 등 필요한 입금은 받을 수 있고, 장례비와 의료비처럼 긴급한 비용은 금융회사가 증빙을 확인해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사망신고 정보는 행정정보 공유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금융회사는 공통 업무기준에 따라 계좌를 제한합니다. 개별 상속인이 따로 차단을 신청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차단은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상속인 확정, 채무 확인, 예금 지급과 상속세 신고는 별도 절차이므로 차단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상속인의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긴급비용 예외는 상속인 계좌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빙을 갖춰 실제 지급처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별 접수 서류와 처리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대상은 사망신고가 접수된 사람 명의의 예금·증권 등 금융계좌와 그 계좌를 관리하는 4,890개 금융회사입니다.

차단 건수, 자동이체 중단 건수와 긴급 예외 지급액은 시행 첫날 현재 공개된 사후 통계가 없습니다. 4,890개사는 참여 금융회사 수이지 차단된 계좌 수가 아닙니다.

정보 공유	매일	종전 월 1회
차단 시점	신고 다음 날	금융회사 수신 뒤
참여 범위	4,890개사	계좌 수와 다름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자동이체 실패의 후속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공과금·대출상환·임대료가 멈춘 뒤 연체나 계약상 불이익을 어떻게 조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 예외 지급 서류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 최소서류와 처리기한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03 · 차단 오류의 정정 시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동명이인·신고 정정 등 오류가 생겼을 때 해제 기한과 이의창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 시행 결과 통계가 아직 없습니다 차단·예외 지급·민원·오류 건수를 공개해야 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사망신고 전에 고인 계좌의 공과금·대출·임대료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합니다. - 장례비·의료비가 급하면 영수증·청구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금융회사에 예외 지급을 문의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금융회사 목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대상회사	- 차단 알림에 허용 입금, 긴급 예외, 필요서류와 이의절차를 함께 표시합니다. - 자동이체가 실패할 수 있는 항목을 상속인에게 안내합니다.
당국	- 업권 공통 예외서류와 처리기한을 공개합니다. - 차단·오류정정·예외 지급 결과를 정기 통계로 공개합니다.

칼럼길

차단 뒤 자동이체 불이익을 함께 조정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계좌는 다음 날 멈추지만 이미 예약된 공과금·대출상환의 후속 처리 기준은 발표문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A 공통 유예 기준 마련 상속인이 계좌를 정리하는 동안 불필요한 연체와 계약 해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B 개별 계약대로 처리 재산 보전은 빨라져도 유족이 여러 회사에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의 공통 업무기준, 금융회사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리서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계좌를 찾아도 돈을 주지 않는다 ↗

[넥서스 브리프](#)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은 어디까지 왔나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2건

01	1차 · 9월 11일 시행·4,890개사·다음 날 차단·허용 입금·긴급비용 직접 지급 금융위원회,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체계 시행, 2026.9.7 · 확인 2026-09-11 원문 열기 ↗
02	1차 · 사망정보의 금융권 공유 목적과 이용 범위 금융위원회 발표 및 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안내, 2026.9.7 · 확인 2026-09-11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업권별 예외 지급 서류·처리기한과 자동이체 불이익 조정, 오류정정 건수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참여 회사 수와 차단 계좌 수를 구분하고 허용 입금과 긴급 예외를 따로 적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정책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정부·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별 상속이나 세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